

근골격계지어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투쟁수칙

공동투쟁위원회 15차 ~ 16차 회의 결과 및 중요 결정사항

1. 2월 16일 2005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이하 4월사업)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투위와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간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4월사업과 관련하여 의의 및 사업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획단을 구성하여 3월 9일에 사업계획을 확정짓기로 하였습니다.
2.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 및 각 단체들은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공동사업 추진위원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노조 1사업을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자추모의 날을 전후하여 4월 25일부터 1주일간 각 노조별 현수막을 설치할 것이고, 조합원 리본 달기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가능한 노동조합에서는 현장점검을 하거나, 조합원 선전전을 기획할 것입니다.

■ 산재보험 공공성강화를 위해 **알고 싸웁시다** 기획연재 2 - 경총은 왜 산재보험료를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지난 소식지를 통해 산재보험료란 "사회적 임금"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총이 왜 산재보험료를 가지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지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공부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에 대한 경총의 우려 ???

작년에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산재보험 줄줄 샌다(해럴드경제 2004년 7월 28일)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감독체계가 느슨해 산재보험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회사에서도 단체협상에 명기된 상여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돼 회사 측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 독점 깨야(중앙일보 2004년 10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전국 1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69.9%가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식대로'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정부산하기관은 치외법권인가?(파이낸셜뉴스 2004년 9월 6일)

산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정부가 쥐고 독점할 이유가 없다. 민영화되면 효율도 높아지고 질도 개선된다.

경총의 입장은 "업무상 재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제도상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을 몰스뚱 써버려서 산재보험 기금이 고갈날 수 있고,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2. 경총의 음모, 민영화와 산재축소 그리고 흡집내기

그렇습니다. 경총은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국가가 산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이 산재보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우리 사회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악몽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대한 자본의 통제는 더욱 거세집니다. 찢리지 않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은 더욱 더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당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것으로 인해 몸과 정신이 파괴되지만, 살



아남은 노동자들은 더욱 강화된 노동강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심혈관계질환이 증가하고 과로사와 돌연사가 늘어납니다. 구조조정은 아니더라도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질병과 사고가 발생할 조

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근골격계 직업병이 증가할 것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총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산재보험 기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너무 쉽게 인정해준다고 공격함으로써 산재인정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난해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이 개악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곳곳에서 불승인이 남발되고 치료종결이 자행됩니다. 한편으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흡집내려고 합니다. 나이롱한자를 들먹거리고, 도덕적 해이를 주장합니다.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투쟁을 왜곡시키려 합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중앙일보 1면 톱으로 “근골격계 질환 영터리 산재 환자 많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12면에는 노조가 병원에 산재인정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사망감을 가지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총이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총이 본격적으로 노동자의 투쟁을 흡집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총은 산재보험 기금이 줄줄샌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영화의 포석을 깔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산재를 축소시키고, 그것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흡집내서 우리 나라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에 의한 심각한 문제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알게 되니 싸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투위”가 싸우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다음 호에서는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쟁소식

■ 노동과건강포럼2005 발족식 및 제1차 포럼 열려

지난 2월 3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참여하는 노동과건강포럼 2005가 발족식을 가졌고, 산재통계의 정상화와 예방적 안전보건정책의 강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우리는 산재은폐의 문제는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현장통계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잘못된 산재통계로 인해 제대로 된 산재예방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게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산재통계개선위원회” 건설을 요구하였습니다. 포럼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포럼 운영위원장의 공동서명으로 이러한 내용의 권고안을 노동부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지난 2월 21일자 공문을 통하여 노동부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산재통계개선TF를 확대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참여시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재해를 조사를 우리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해낸다면 은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엽기 판정

현대자동차 전주지부의 조합원인 이** 동지는 04년 7월 경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요양판정을 받았습니다. 7개월째 요양 중 목과 팔이 너무 아파서 주치의에게 검진을 받고 '경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병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동지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연기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이00 조합원은 제3의료기

관인 전북대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는 역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써 중증이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공단에 요양연기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번에는 추가상병은 인정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요양은 연기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7개월간 치료를 했기 때문에 요양기간은 충분했다는 엽기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먼저 치료를 받았던 부위는 허리고, 새롭게 발견된 통증부위는 목입니다. 7개월간 요양하면서 목은 치료를 받았을리 없는데, 목과 허리를 싸잡아 7개월 치료면 되는데 그 기간을 넘겼으니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전주지부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한 조합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화학섬유연맹, 『노동자가 사용하는 사고조사 매뉴얼』 발간



화학섬유연맹은 지난해부터 “중대사고 대응과 유해물질조사를 위한 노동자 사업단”을 여수에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노동자가 사용하는 사고조사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각종 폭발화재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사고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참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화학섬유연맹은 이후 이 조합원 교육을 통해 사고조사 프로그램을 여수 산단 부터 뿌리내리게 할 계획입니다.